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13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.

발 의 자 : 이용우 · 한정애 · 민병덕
김남근 · 백혜련 · 강유정
백승아 · 모경종 · 박주민
김교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, 소음·진동방지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·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,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.

현행법은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영업정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

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
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
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납세자의 인적 사항
2.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
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

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환경전문공사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 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: 국토교통부장관
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: 국토교통부장관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: 시·도지사

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5조의2(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) ① 시·도지사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시·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납세자의 인적 사항</u> <u>2.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</u> <u>3.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때</u>

출금액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다만, 환경전문 공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
건축물대장 등본: 국토교통부
장관

2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
등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
따른 토지대장 등본: 국토교통
부장관

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
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: 시
· 도지사

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
한 과징금은 「환경정책기본
법」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
의 세입으로 한다.